

== 사 설 ==

인천AG, 동계오륜 발목잡아선 안 돼

-동계올림픽 특성·강원도의 열악한 인프라 고려해야

여야 국회의원 56명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국비지원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뜰이나 기획재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국비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명분이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강원도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기장 시설비 75%와 인접 도로비 70% 이상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국비지원 배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1조9400억원이 소요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기존의 국비지원(23%) 3800억원 외에 8000억원이 추가 지원될 경우 그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원액이 줄어들 수도 있음에서다. 이뿐 아니라 내년 총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2.5%에 불과하다.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비지원에 따라 경기장과 진입로를 건설한다 해도 기본 인프라구축에만 매년 1000억원씩 지방비가 투입돼야 한다. 연간 가용 예산이 2500억원 밖에 안 되는 강원도로서는 힘에 겹다 못해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가 염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강원도가 특별법 시행

령에 요구한 핵심 사업인 대회 관련 부대시설과 올림픽특구내 경관정비사업 지원이 모두 빠져 있는 상태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식수 전용저수지 건설도 지원에서 제외됐다. 하루 2만3000t이 필요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저수지건설비 462억원과 상수도 시설비 368억원 등 830억원이 필요하다.

동계스포츠는 다른 경기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거의 모든 경기가 산악지대에서 열린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있다해도 국제대회를 치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다른 국제대회보다 배 이상 더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을 물고 늘어져 다른 국제대회도 똑같이 지원해달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올림픽은 하계든 동계든 간에 다른 국제대회와는 격(格)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19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 지난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스포츠 강국이 됐다. 그런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이 예산지원 문제로 인해 성공개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된 문제다.

